

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 집중점검방안

2026. 3. 12.

관 계 부 처 합 동

순 서

I. 추진배경 및 그간 성과	1
II. 특별관리 품목 선정	2
III.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	2
[참고] 23개 특별관리 품목 점검방안	3

I. 추진배경 및 그간 성과

□ (배경) ①불공정행위, ②부정수급 근절, ③유통구조 혁신 목표로 민생물가TF 출범(2.11)

- ① (불공정거래 단속) 담합·경쟁제한 등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해 신속 조사·단속 추진
 - ② (부정수급 근절) 할당관세·할인지원 등 주요 물가안정 정책의 이행 실태 점검, 부정수급 적발시 즉시 수사의뢰 및 개선방안 마련
 - ③ (유통구조 혁신) 소비자단체 등과 협업하여 유통단계별 실태 조사 실시 및 정보공개 확대 등 적극 추진
- ☞ 핵심 민생물가 품목들에 대해 상반기 집중점검 추진

□ (성과) 불공정 우려품목 발굴·제재 및 할당관세 제도개선방안 마련

- ① (불공정거래) 담합, 불공정행위 등 우려품목 발굴 및 집중단속
 - 설당 담합의혹 기업 과징금 부과(2.12일), 밀가루 제재 착수(2.19일) → 주요 설당·밀가루 업체 소비자가격 △4~△6% 인하*
 - * (설당) CJ제일제당 △5~6%, 삼양사 △4%
(밀가루) CJ제일제당 △4~5.5%, 삼양사 △6%, 대한제분 △4.6%, 사조동아원 △5.9%
 - 교복가격·학원비 전수조사 및 특별점검(2~3월)을 실시하고,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강화 등 제도개선* 추진
 - * (교복) 생산자 협동조합 등 공급주체 다변화, 편한 교복으로 전환 추진, 지원방식 다양화 등 (학원비) 초과교습비 등에 대한 과징금 신설 및 과태료 상향, 신고포상금 상향 등
 - ② (부정수급) 할당관세 등 이행실태 점검 및 유통절차 개선
 - 부정행위 가능성이 높은 냉동육류 등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*으로 지정 추진(관세법 시행령 개정('26.上) 통해 지정근거 마련)
 - * 집중관리품목은 보세구역 반출과 유통 의무기한 설정, 의무위반시 할당추천 취소 및 관세 추정
 - 할당관세 품목 수입·유통·판매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전담기구를 지정하고, 수입 → 소매업체로 직공급되도록 유통단계 대폭 축소
 - ③ (유통구조) 구조적 문제가 우려되는 품목* 선정 및 현장점검 추진 → 가격정보 공개, 정부비축, 할인지원, 제재강화 등 시행 예정
- * 농축산물(계란, 돼지고기, 식용유, 마늘), 수산물(고등어, 김), 공산품(화장지, 세제, 종이거저귀), 의약품 등

Ⅱ. 특별관리 품목 선정

- ◇ **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및 체감물가 안정**을 위해 **23개 특별관리품목**을 우선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고(참고), 문제점 발견시 **품목 추가 검토**

① **민생 핵심 먹거리** 물가 관리

- ▶ (곡물) 쌀, 콩 등 핵심 곡물 비축물량 공급을 통한 수급·가격안정 및 현장 모니터링
- ▶ (농축산물) 돼지고기, 계란 담합건 제재여부 등 결정, **마늘** 불공정거래 우려 관련 현장점검
- ▶ (수산물) 고등어 할당관세 현장점검 및 수입선 다변화 등 유통구조 개선, **김** 수급조절 강화
- ▶ (과일) 수입과일 할당관세 가격반영 점검 위한 합동 유통실태 조사
- ▶ (식품원료·가공식품) 밀가루, 전분당 담합건 제재여부 등 결정, **가공식품** 원가 인하요인 점검 등

② 주거·에너지 등 **민생 핵심 서비스** 투명성 강화 및 품질 제고

- ▶ (관리비) 공동주택, 집합건물 등 관리비 운영실태 점검 및 제도개선 추진
- ▶ (석유류) 최고가격제 시행 및 매점매석 단속, 가격·물량 담합조사 등 추진
- ▶ (통신비) 데이터 안심옵션 확대,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등 시행
- ▶ (암표) 암표금지 위한 공연법·국민체육진흥법 개정(2월 완료, 8월 시행) + 집중 모니터링

③ **민생 핵심 공산품** 관리 강화

- ▶ (교복) 교복가격 조사 및 적정성 검토, 구매제도 개선 등
- ▶ (필수 생활용품) 화장지, 세제, 종이기저귀 등 쏘단계(원자재수급→제조→유통) 가격요인 점검
- ▶ (생리용품) 불공정거래여부 조사 및 정부지원 확대 위한 시범사업 운영 검토
- ▶ (의약품) 가격인상계획 사전공유 체계 유지 및 가격모니터링 실시

Ⅲ.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

- 특별관리 품목별 소관부처가 책임있는 점검 및 개선방안 추진
- 상반기 집중점검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고, 이후 ‘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’를 통해 체감물가 안정 지속
- ☞ 단속·점검 결과가 1회성 조치가 아닌, 제도개선·구조개혁 등 근본적·근원적 물가안정 기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안착

참고

23개 특별관리 품목 선정사유 및 점검방안

분류	품목	내용
민생 핵심 먹거리 (13)	돼지고기 (농식품부, 공정위)	▶ 9개 돼지고기 가공·판매사 대형마트 납품 돼지고기 가격담합 → 공정위 심의를 통해 제재 여부 및 수준 확정(3.11일) ▶ 돼지고기 도축 ~ 소매판매까지 유통구조 점검 필요 → 단계별 유통비용 적정 여부, 부당 거래 사례 등 집중 점검 추진 및 제도개선사항 도출(~5월)
	냉동육류 (농식품부)	▶ 저장성이 높아 시세차익 목적의 유통 교란 발생 등 우려 → 농식품부·aT·축평원 합동 유통실태 조사 실시
	계란 (공정위)	▶ 대한산란계협회(생산자단체)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건 상정 * 협회 발표 고시가격을 인상하여 도매가 상승 유도 → 공정위 심의를 통해 제재 여부 및 수준 확정('26.上)
	고등어 (해수부)	▶ 대표적인 국민 생선이나, 할당관세 적용(~12월말, 2.5만톤)에도 수입산 가격 상승, 어획량 감소 등으로 소비자가격 높은 상황 * 수입산 가격(대형, 1손 기준): ('25.1) 8,446 → ('26.1) 10,642원(+26.0%) 소비자물가지수(국내·수입 포함): ('25.1) 121.4 → ('26.1) 135.7(+11.7%) → 해수부·수협 현장점검 실시 → 재고량 조사주기(現 3개월) 단축·현장점검 등 '숨은 물량' 시장유통 + 수입선(칠레 등) 다변화 등 추진
	쌀 (농식품부)	▶ 저장성이 높아 정부 비축물량 공급으로 수급·가격안정 필요 → 비축물량 공급시 현장 모니터링 및 시장 판매여부 점검
	콩 (농식품부)	▶ 저장성이 높아 담합 등 불공정거래의혹 및 부정유통 우려 → 도매·가공·저장단계 유통실태 상황진단 및 비축물량 판매처 합동(농식품부·aT) 방문점검 → KREI, aT, 농협, 가공협회, 냉장협회, 생산자단체 등과 개선방안 마련 회의(월 2회), 필요시 공정위 조사 의뢰
	마늘 (농식품부)	※ '25년 마늘 도매가 상승*으로 저장·가공업체의 불공정거래(담합) 행위 공정위 신고 사례(증거부족으로 조사 미진행) * '25.3~5월 깐마늘 중도매인 가격이 전년비 42%↑, 평년비 40%
	수입과일 (농식품부)	▶ 할당관세 적용에도 소비자가격에 인하효과 반영 수준 불확실 → 농식품부·aT 합동 유통실태 조사 실시

분류	품목	내용
	김 (해수부)	▶ 대표적인 서민음식이나, 생산량이 기상영향을 크게 받고, 보관·비축 등 수급조절 수단부재로 가격 변동성이 큰 상황 → 생산물김 생산 확대, 유통보관·비축 능력 제고, 가공가공산업 고도화 등 공급망 혁신(5월중 발표)
	밀가루 (공정위)	▶ 7개 제분사 밀가루 판매가격 담합 건 상정 → 공정위 심의를 통해 제재 여부 및 수준 확정('26.上)
	전분당 (공정위)	▶ 4개 전분당 제조·판매사 전분당 기준가격 담합 건 상정 → 공정위 심의를 통해 제재 여부 및 수준 확정('26.上)
	식용유 (농식품부)	▶ 국제 원재료 가격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고, 상위 5개 기업*의 시장집중도가 높아 유통단계 불공정계약, 과도한 유통마진, 입점업체 비용전가 등 문제 발생 * CJ제일제당, 롯데푸드, 사조대림, 대상, 오뚜기 → 업계간담회, 현장점검 등을 통해 원가 인하요인 점검 (가격인하 여부 검토 요청 등)
	가공식품 (농식품부, 공정위)	▶ 설탕, 밀가루, 전분당 등 원재료의 가격 인하가 관련 가공식품의 가격인하로 연계 미흡 * 라면·빵·과자·아이스크림 → 업계(라면) 간담회, 현장점검 등을 통해 원가 인하요인 점검 (가격인하 여부 검토 요청 등) * 양산빵, 제과류, 빙과류는 순차적으로 진행 예정
민생 핵심 서비스 (5)	석유류 (산업부, 공정위)	▶ 국제유가 상승대비 국내 석유류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 → 최고가격제, 매점매석 단속, 가격·물량 담합조사 등 추진
	아파트 관리비 (국토부)	▶ 일부 정비되지 않은 공사·용역 발주 규정 등이 관리비 인상 유발 요인으로 작용 →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한 운영실태 점검 및 제도 개선 추진
	집합건물 상가 관리비 (법무부)	▶ 1인 거주 오피스텔, 연립주택 등 소규모 집합건물은 관리비의 투명한 징수를 담보하기 어려움 → ①어디에 거주하든지 관리비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고, ②건물 관리에 거주자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며, ③지자체장의 감독권한을 강화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제고 위한 법률* 정비 추진 * 주택임대차보호법·집합건물법

분류	품목	내용
	통신비 (과기부)	▶ 통신 부문* 물가는 안정적(1월 0.4%)이나, 통신서비스는 AI시대의 필수재 + 통신3사 과점구조로 지속 관리 필요 * 우편서비스, 휴대전화기, 유선전화료, 휴대전화료, 인터넷이용료, 휴대전화 수리비 → 통신요금제 신설·변경시 사전에 적극 협의 + 데이터 안심옵션 확대(~'26.上),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시행
	암표 (문체부, 경찰청)	▶ 공연예술·운동경기 입장권의 암표 매매 등 시장 거래 교란행위가 만연 → 공연법·국민체육진흥법 개정완료*(2월 개정, 8월 시행 예정) + 주요행사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 실시 * ① 모든 암표 부정행위 금지, ② 사업자 부정행위 방지조치 의무 신설 ③ 부정행위 신고자 포상금 도입 ④ 과징금 부과 신설(50배이하) ⑤ 몰수추징 신설
민생 핵심 공산품 (5)	인쇄용지 (공정위)	▶ 6개 제지사 인쇄용지 판매가격 담합 건 상정 → 공정위 심의를 통해 제재 여부 및 수준 확정('26.上)
	교복 (교육부, 공정위)	▶ 교복구매 입찰과정 담합행위 등 조사 개시 → 교복 가격 적정성 검토 및 학교주관 구매제도 개선 + 4개 교복 제조사·38개 대리점에 대한 조사 신속 마무리
	생리용품 (성평등부, 공정위)	▶ 생리대 물가지수 증가율은 소비자물가지수 대비 높고* 동일제품도 유통채널별 가격 차이가 큰 상황 * '20년 대비 상승률 : (생리대) 19.3% (소비자물가지수) 16.6% → 생리대 가격결정 관련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^{공정위} 및 정부 지원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^{성평등부} 운영검토('26.3월~)
	필수 생활용품 (산업부)	▶ 가격 상승 상위품목 중 가계 필수품, 원자재 대외 의존도, 주요기업 시장 집중도, 가격 하방 경직성 등 고려하여 품목선정 → 화장지·세탁세제·주방세제·종이거저귀의 쉼단계별 (원자재 수급 → 제조 → 유통) 가격 상승요인 점검
	의약품 (복지부)	▶ 원료의 70% 이상을 수입하여 환율변동 등에 취약 → 가격 인상 계획 사전 공유 체계 유지('26.2~), 다소비 일반의약품 가격 모니터링 지속 실시 등